

정부의 건강증진정책 방향

The Policy Direction for Health Promotion in Korea



오 상 윤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 Sang-Yoon Oh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E-mail : nome61@mw.go.kr

J Korean Med Assoc 2009; 52(7): 634 - 636

Abstract

It has been over 10 years since the health promotion policy is carried out by government and the level of health of Korean people has been dramatically improved. However, persistent increase in chronic diseases and the rapid aging require comprehensive health promotion policies for the establishment of cost effective health care system. Furthermore, the current global economic difficulties necessitate th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health care system for underprivileged groups of people. In 2009, in an effort to effectively remedy these situations,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implemented a new health promotion policy with focus on five strategic areas; reinforcement of health care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groups; strengthening health promotion management including smoking and obesity prevention; preparation for the next generation's health by supporting pregnancy and childbirth; establishing the preventive system for chronic diseases such as cardiovascular disease and asthma; governmental support for suicide and alcohol abuse prevention and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service. From the socioeconomic perspective, the current health promotion policy in Korea contributes to raising national income level by producing job opportunities,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new service sector. It is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Health Care Service will contribute more to this trend.

Keywords: Health promotion policy; Underprivileged; Preventive system; Mental health care; Health care service

핵심용어: 건강증진정책; 취약계층; 예방적 관리체계; 정신건강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증진정책의 성과와 정책여건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과 1997년 건강증진기금의 신설·운용을 시점으로 우리나라 건강증진정책은

어느덧 추진 10여년을 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금연, 절주, 운동 및 영양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생활행태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은 빠르게 향상되었다. 국가의 건강수준을 대표하는 건강지표인 평균수명은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97년 남자 70.6세, 여자 78.1세'에서 '07년 남자 76.1세, 여자 82.7세'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남자 76.1세, 여자 81.8세를 능가하는 수치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건강정책들은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켰으며, 고혈압·당뇨병 관리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질병 구조는 만성 질환과 합병증 위주로 전환되었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 치료보다는 예방 위주의 건강정책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게 되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고위험 임신부 및 미숙아·저체중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노인 인구와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정책도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경기침체는 건강증진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취약 계층의 경제위기가 건강관리 소홀과 건강수준의 악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서민 의료비 부담의 증가와 가계 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정책 전략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의 5가지 전략으로 건강증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구, 임신부·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수행 인력을 2008년 2천3백명에서 2009년 2천 7백명으로 400명을 신규로 투입하고 관리대상도 100만 가구에서 120만 가구로 늘렸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저소득층 임신부와 6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영양교육과 상담, 보충식품 등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153개 지역에서 2009년 245개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총 33,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만 40세 및 66세 인구에게는 해당 연령대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심으로 건강을 진단해주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올해 129만명에게 실시하고, 만 70세 및 74세 노인에게는 건강검진 시에 치매검사항목을 추가하여, 올해 총 34만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하여 검진항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국가가 검진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여 국가건강검진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한편, 암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을 5%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을 2008년 4만5천명에서 2009년 5만3천명으로 늘렸으며,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 지원도 30개소에서 34개소로 늘렸다. 아울러 작년까지 7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제공되었던 의치보철사업의 지원대상을 2009년에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동에 대해서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을 27만1천명에게 지원함으로써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평생 구강건강관리체계를 점차 확립해 나가고 있다.

둘째, 흡연, 비만 등과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부분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 40%를 웃도는 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모든 실내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흡연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비만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미래세대 건강보장을 위한 선천성 장애 예방, 불임 부부 지원 등 임신·출산에 대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지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청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가 진단되면 의료비 및 특수분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지원하였던 의료비 지원대상을 만여명에서 만2천여명으로 늘리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한 난청 선별검사도 약 4만명에게 지원할 것이다. 또한 불임부부에게 지원되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를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임신부의 날 지정, 임신부 배려 캠페인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사회를 만

들이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임신부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방 대학병원에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등 모자보건 관련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엄마와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모수첩과 철분제를 제공하고 모유수유클리닉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결혼이주 여성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통역원을 19명에서 30명으로 늘렸다.

넷째,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건강관리와 아토피·천식 예방을 강화하는 등 만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것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 등록 환자에 대해 자가관리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합병증 검진 및 진료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 포인트제도를 2009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또한 올해 안에 시범사업 지역을 늘림으로써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체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는 말라리아, 콜레라와 같이 기온상승과 관련된 전염병을 예방하는 한편, 노인, 만성 심폐질환자 등 더위에 취약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토피, 천식 등 환경의 영향으로 악화되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적절한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지역사회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의 총괄 기능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보건소 지원 기관 수를 2008년 5개소에서 2009년 42개소로 대폭 늘렸으며, 상반기에는 천식예보제 시범사업도 수행할 예정이다.

다섯째, 자살 및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과 아동·청소년 정신·행동문제 조기발견 확대 등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경제 불황과 가정 불화,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많아지는 가운데, 유명인들의 잇따른 자살로 인하여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24시간 상담전화와 사이버 상담 사이트를 운영하고,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적절하게 개입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선별검사를 470개 학교에서 실시하여 조기에 정신건강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 학생 수도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려 20만명에게 실시하기로 하였다.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사업장별 절주교육 및 대학생 절주동아리 지원 등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음주 폐해를 예방할 것이다. 그리고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알코올 관련 재향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결 론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증진정책이 처한 환경과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증진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고령화와 만성 질병 급증 속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령을 대비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으로 정부는 국민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일자리 확충을 통해 국민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최근 추진중인 사람들이 금연·절주·식이·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국민들의 질병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의료제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순기능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중요한 과제에 대하여 가장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보유한 이들이 의료인들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향후 정부의 건강증진정책과 함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입법 추진과정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